

## 정 책 과 제 도

# 2002년 양대 노총 및 경총 사업계획\*

진속경\*

- 2002년 노사단체들은 연초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작년에 이어 여전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과 관련한 대립이 예상됨. 또한 올 해 주요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활동에 따라 노사간 대립구도도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보임.
- 한국노총은 2월 7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여 조직 리더십을 안정화시켜 조직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2002년을 ‘빼앗긴 권리 되찾는 해’로 규정하고 노조내부 조직를 회복과 패배감 극복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
  - － 주 5일 근무제, 공무원·교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비정규직 문제 등 제도개선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정치세력화 및 구조조정 저지, 조직 확대와 쇄신,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통일활동을 강화할 방침
- 민주노총은 2002년 국내정세의 특징으로 소득격차 심화에 따라 희생당하는 중소기업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는 한편 권력재편기의 진보 진영 정치세력화 시험 및 변화된 노동시장에 따른 새로운 조직방안 모색 움직임과 반전 평화문제의 전면적인 등장이라고 전망
  - －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어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구조 악화 등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
  - － 경제위기 직후부터 지속된 인력감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지속되어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indori@kli.re.kr).

전망

- 수세적 입장에 처했던 노동계가 2002년에는 반격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주장이 강화되고 노조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하여 노조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조직률 및 민주노총 조직률 증가로 인해 노조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파악
- 4기 집행부에서 지도력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나 현 위원장이 구속상태이므로 한동안 과도적인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
-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제도 개선문제와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 요소의 존재와 경제호전 전망에 따른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은 임단협 과정의 노사 갈등을 증폭시켜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정권말기와 선거정국을 맞아 공직기강이 이완되고 노동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노사관계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노동계가 양대선거 과정에서 정치세력화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월드컵 등 국가 대사를 활용하여 법제도 개정과 구조조정 반대 등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 선거정국에 편승한 노동계의 정치활동 대응,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산별노조 출범에 따른 경영계 대책 강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제시, 디지털시대의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국제 노동외교 및 홍보활동 전개 등 6가지 항목을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 II. 2002년 핵심 사업

### ◆ 노사 유리한 방향으로 법개정 추진 위해 갈등

- 양대노총과 경총이 2002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
  -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내 협상을 중심으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나간다는 원칙. 법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단위노조의 2002년 임단협과 연계한 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선거국면에서는 정책적 요구와 연결시킬 방침
  - 법개정 논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주 5일제 도입과 함께 거론되는 주 5일제의

단계적 실시, 휴가일수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근로조건 저하에 반대하며 개악된 내용의 개정안 국회 상정시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 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 계획 수립

-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금보전문제, 휴가일수, 임금할증률 등 관련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토록 하는 한편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
-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와 공무원·교원 노동권 강화,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등 노동법 개정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기업은 노동유연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루려 하기 위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에 대한 로비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으로 보임.

#### ◆ 정치세력화 활동 활발히 전개

- 2002년 상반기 지방선거와 하반기 대통령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이 겹치면서 노동·경영단체들의 정치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
- 한국노총은 지방선거시 정당의 제한을 두지 않고 ‘친한국노총’ 후보를 다수 진출시킬 계획이며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역량을 강화하여 정책연대를 통해 지지후보를 확정할 계획
  -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진출을 통한 한국노총 지역정치역량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여 무소속 한국노총 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정당과의 제휴를 통한 정당공천 후보도 다수 확보한다는 방침. 지지정당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으며 특히 단체장 선거에 조직역량을 집중기로 함.
  - 대통령선거 대응방향은 7월경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정할 방침.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미완의 정책연합은 지양하고 2004년 독자적인 정당 설립을 고려한 후보 전술을 채택한다는 원칙. 대선 판도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정책연대 대상을 가능한 한 조직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양대 선거에서 노동자, 민중투쟁을 결합하여 보수와 진보의 대립전선을 구축하고 현실정치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할 목표를 설정
  - 양대 선거를 통해 진보정치세력의 현실정치 교두보를 마련하고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며 민주노동당을 통한 후보 전술이 핵심 활동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선거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수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여 선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대중적으로 검증받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선거에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다수 출마할 수 있도록 조직적 결의를 모아나가는 동시에 조직적인 선거지원과 투표의 모범을 만들어 나갈 계획
  - 또한 정당명부제, 정치개혁,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민주진보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할 방침
- 경총은 노동계가 선거와 월드컵 등 시기를 활용하여 법개정과 구조조정 반대 등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것으로 전망.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노사화합 결의대회·신노사문화운동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전개 계획
- 경총은 대통령선거에서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기 위하여 대정당활동을 펼칠 계획

### Ⅲ. 조직사업

#### ◆ 조직형태 전환모색

- 민주노총은 2001년 6월말 현재 내부조직 실사를 벌인 결과 기업별노조의 틀을 넘어 산업별 단일노조나 지역노조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이 39.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 민주노총 노조가입 형태를 보면 2001년 6월말 현재 총 1,291개 노조 중 기업별노조가 1,222개(94.7%), 조합원 35만 5,652명(60.1%)이고 산별노조는 22개(1.7%), 조합원수는 22만 4,529명(37.9%), 지역노조가 47개(3.6%), 조합원 1만 1,966명(2.0%)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발표
  - 유사한 성격의 산별연맹간의 조직 통합으로 1998년 8월말 현재 20개이던 산별연맹수를 2001년 6월말 현재 16개로 정리하고, 이들의 산별노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조직체계 전환에 주력하고 있음.

-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지속적인 조직확대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화학섬유연맹 등이 2002년 중으로 산별노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여 2003년까지 조직체계 전환을 완료하고 2005년에는 산별 교섭을 성사시킬 목표 수립
- 이에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산별노조 건설 경로와 시기에 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3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 결의할 계획이며, 산별연맹 조직구획 정리, 산별교섭 관련 법개정 사업을 벌어나갈 방침
- 한국노총은 화학노련에서 식품연맹, 연합노련에서 아파트연맹 등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던 동종업의 독립연맹화로 산별연맹이 28개에 이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중앙 주도하에 유사한 성격을 갖는 연맹의 통합 논의를 추진하면서 각급 조직의 산별노조 추진을 지도해 나갈 방침
- 경총은 노동계의 산별노조 체계로의 개편과 임단협 과정에서의 산업·업종별 공동 교섭 요구와 상급노동단체로의 교섭권 위임 등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교섭체계의 혼란과 교섭지연, 집단행동의 증가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교섭체계의 정착을 위해 적극 대응
  - 경총은 업종별·지역별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교섭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섭권 위임에 경총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현황과 쟁점에 대한 분석과 산별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활동을 벌일 계획

#### ◆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조직 확대

-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조직화는 2002년 노동계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정규직 조직 대중을 주대상으로 활동해 온 노조 조직들의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인적·재정적 역량은 매우 취약함.
  - 조직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 노동자 상당부분이 조직되어 있어 정규직 중심의 노조활동으로는 조직력 확대에 한계가 있음.
  - 대기업 노조의 교섭력 향상으로 노동자 내부 임금이나 생활수준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는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중소기업체 노동자 보호 및 조직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조직화 기금 5억원 조성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2001년 12월 현재 약 1억 2천만원 조성)

- 일차적인 조직대상을 소속 사업장 비정규, 중소기업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조규약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
  - 비정규 중소기업 노동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해 상담소를 구축하고 지역일 반노조나 산별노조를 통해 조직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히 정보통신영역과 여성, 유통서비스 등 특화된 조직사업 강화
- 한국노총은 총연맹 차원의 비정규 특위활동을 전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임단협 공동투쟁을 계획. 또한 10월경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연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
- 경총은 최근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식·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기업의 대외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 인력관리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등 기업의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강구

## IV. 임단협 계획

### ◆ 월드컵 시기와 맞물린 임단협

- 임단협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시기가 6월 월드컵 개막시점과 맞물려 있어 ‘노사평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여 임단협 시점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 경총은 월드컵 대회나 정치 일정 등 국가 대사를 틈탄 산업현장내 불법행위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
  - 반면 노동계는 월드컵 대회 등으로 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월드컵에 웬 파업?’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우려
  - 노사 모두 월드컵 대회 시기에 임단협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어 최대한 이 시기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 임금인상요구를 노사간 격차 커

- 민주노총 2002년 임금인상요구안이 12.5%(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1.0~14.0%), 한국노총이 12.3%(정액 200,104원)로 요구 수준이 비슷한데 비해 경총은 4.1% 인상안을 제시
  - 중앙단위의 임금인상요구 지침은 단위사업장 노사 쟁점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 경기호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구조조정 시기에 저하되었던 노동조건의 회복과 높은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어 단사 차원의 노사 대립이 심화될 조짐
- 노동계는 조직내 임금인상 요구와는 별개로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하에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여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를 단계적으로 쟁취할 목표로 올해는 45% 수준을 이뤄낸다는 계획임.
  -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을 확보하는 과정에 산업별 최저임금의 협약화를 요구해 나갈 계획. 산별 임금교섭과 연동하여 전체 임금인상률을 양보할 경우 최저임금수준을 확보하는 등 교섭전술로 활용할 계획

### ◆ 시기 집중을 통한 연대활동

- 2002년 3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보호 강화,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되며 노동계는 핵심 요구사항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투쟁돌입 시기를 집중해 나갈 방침
  - 노동계는 제도개선과 사회개혁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총연맹을 중심으로 선거국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내고 선거 공약화하도록 노력하며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등 중앙집중적인 집회 등의 전술을 구사할 예정
  - 민주노총은 1, 2차 투쟁시기를 나누어 진행한 계획. 1차적으로 5월 중순에 임단투 시기 집중 연대파업을 전개하고, 5월 중순까지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않은 노조의 경우 월드컵이 끝난 이후인 7월 초순경에 투쟁시기를 집중할 계획
  - 한국노총은 2월말 임단협 투쟁 준비 및 임투지침의 배포, 3월 임단투 순회교육, 3월 중 임금교섭 요구 및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개최, 5월 초순 쟁의찬반투표, 5월 하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

- 한편 민주노총은 구속 위원장 석방문제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배제적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사회쟁점화시켜 나가고 국제 연대를 통한 압박도 강화해 나갈 계획. 3월 ILO 총회 등에 민주노총 대표단을 파견하여 석방문제를 국제적 쟁점으로 만들어갈 방침

## V. 노사의 중장기적 과제

### ◆ 새로운 노사시스템 마련 노력

- 1987년 이후 한국 노사관계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근거해 결과에 대한 분배를 둘러싼 갈등에 기초한 대립적 노사관계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노동시장이 현재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
  - 경제위기 직후 노동시장 유연화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양상을 띠게 되었으나 점차 상시적 구조조정 양태로 전환하고 있음.
  -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법령 정비 및 중장기적인 관행 변화의 필요성 제기
- 경총은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장기적 전망을 연내 마련할 방침. 실업문제나 산업재해, 보건문제 등 그 동안 노사가 핵심과제로 제시하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한 연구활동 전개
- 노동계는 노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직내 개혁과 혁신사업을 벌여나갈 것으로 전망
  - 한국노총은 전임 위원장의 정계 진출에 따른 1년 6개월 보궐임기기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3년간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할 계기를 맞아 전반적인 내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
  - 민주노총 또한 조직설립 초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및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규약 정비에 나설 계획

◆ 조세개혁·교육문제 등 사회개혁 요구

- 노동계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도시서민, 빈민의 생활권을 확보하고 사회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조세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의료개혁 등 사회개혁 요구를 총연맹 차원에서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정
  - 민주노총은 전국민적 차원에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강화를 통해 통일사업을 비롯해 환경문제 등 사회개혁 안전에 대한 노조의 참여를 높여나갈 방침
  - 반전운동 및 투자협정 WTO 반대 등 반세계화 운동 등 국제적인 연대활동의 사안과 결합 수준도 더욱 높아질 전망